

2011

연구보고서(수시과제) - 10

지방자치단체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연계방안 연구

전기택 · 김경희 · 정가원 · 이연지

KW/D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지방자치단체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연계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전 기 택 (본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김 경 희 (본원 연구위원)

정 가 원 (본원 연구위원)

이 연 지 (본원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발 간 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및 시행, 지방 성인지예산서 작성, 통계법 강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성인지예산서 작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들 세 제도 연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법적 근거 부재, 제도 간 발전 수준의 편차로 등으로 인해 이들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의 연계가 현실화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를 제도 추진 일정, 대상사업, 평가 지표, 추진체계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제안하였습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양식 및 지침(안)을 개발하여 정부에 제안하였습니다.

이 연구가 제안하는 정책 방안은 평소 성인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제도 정착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애써 주신 원내외의 전문가 여러분들의 노고와 연구 수행을 위해 힘쓴 연구진의 노력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 9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 장 최 금 숙

연구요약

1. 연구개요

가.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¹⁾

나. 연구내용

- 1)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의 법적 근거인 통계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지방재정법의 관련 내용을 검토함.
- 2) 지방재정법 시행령(안)의 성인지예산서 필수요소, 지방자치단체 재정구조 및 예산편성 지침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양식 및 지침(안)을 개발함.
- 3)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서 연계 방안을 제도 추진 일정, 대상사업, 평가지표, 추진체계의 측면에서 제안함.

다. 연구방법

- 1)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각종 문헌자료를 수집, 검토함.
- 2)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및 지자체 전문연구기관 등과 자문회의를 개최함.
- 3)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지자체 공무원, 지방의회, 지자체 전문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함

1)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정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문맥에 따라서 성별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2개를 혼용하여 사용하였음.

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양식 및 지침(안) 개발

I. 시도/시군구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예산 총괄표

- I - 1. 내년도 재정전망
- I - 2. 시·도 재정운영 방향
- I - 3. 시도/시군구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예산 편성의 방향
- I - 4.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총괄표

II. 성인지세출예산서

- II - 1. 성인지예산 규모
 - 가. 부서별 성인지예산 현황
 - 나. 성인지예산 사업 설명자료
 - 다. 부서별 성인지예산 현황
 - 라. 성인지예산 사업 설명자료
- II - 2. 성평등 목표별 예산 규모

III. 성인지세출사업명세서

- III - 1. 부서별 성인지예산서
 - 가. 부서별 성인지예산 현황
 - 나. 성인지예산 사업 설명자료
- III - 1. 부서별 성인지예산서
 - 가. 부서별 성인지예산 현황(서식)

○ ○ 과

☐ 부서의 성평등 목표

☐ 성인지예산 개요 및 규모

○ 성인지예산 개요

○ 성인지예산 규모 및 명세

(단위: 백만원, %)

구 분		분야	부문	대과제	중과제	서비스·내부	대상자	수혜자	(전년도) 예산액	(당해연도) 예산액	증가율
정책사업	국가성인지 예산 작성사업										
	사회복지사업										
	지자체장 공약사업										
	기타사업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전년 도) 예산 액	(당해 연도) 예산 액	증감 율	대과 제	중과 제	서비 스 · 내부	대상 자	수혜 자	정책 사업 구분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국고)									
308 자치단체등이전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장애인복지일자리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308 자치단체등이전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지원 (18명)									
◎ 경로당 난방비(2,818개소)									
◎ 경로당 운영비(2,818개소)									

나. 성인지예산 사업 설명자료(서식)

세부사업 : ○○-○○

○○세부사업명

회계연도 : ○○○○년 회 계 : 일반/공기업/기타/기금

조 직 : ○○실국 ○○과팀 기 능 : ○○분야 ○○부문

정책사업 : ○○정책사업명 단위사업 : ○○단위사업명

성인지 사업 영역: : 분야 - 부문 - 정책- 대과제 -중과제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사업내용, 사업위치, 추진근거, 추진경위, 추진계획

□ 소요재원

(단위: 천원)

재 원 별	전년도 예산액	당해연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 산 총 계				%
국 고 보 조 금				%
균 특 보 조 금				%
기 금 보 조 금				%
특 별 교 부 세				%
분 권 교 부 세				%
시 도 비				%
시 군 구 비				%
지 방 채				%
기 타 (예 산 외)				%
기초자치단체부담금 (시 군 구 비)				%
채 무 부 담				%
민 자				%
재 정 용 자 금				%
기 타				%

※ 전년도예산액은 당초예산 기준

□ 성별수혜

○ 대상자 수 : 이호조 시스템에서 선택, 코드(개인1,가구,집단2)

	2010	2011	2012
여성			
남성			
공동(양성평등)			

○ 수혜자 수(개인1,가구,집단2/ 1차수혜a, 2차수혜b, 3차수혜c, 불특정수혜d)

	2010	2011	2012
여성			
남성			
공동(양성평등)			

* 2010년은 집행기준, 2011년, 2012년은 추정치를 작성

○ 성별 소요재원

	2010	2011	2012
여성			
남성			
공동(양성평등)			

* 2010년은 집행기준, 2011년, 2012년은 추정치를 작성

□ 성평등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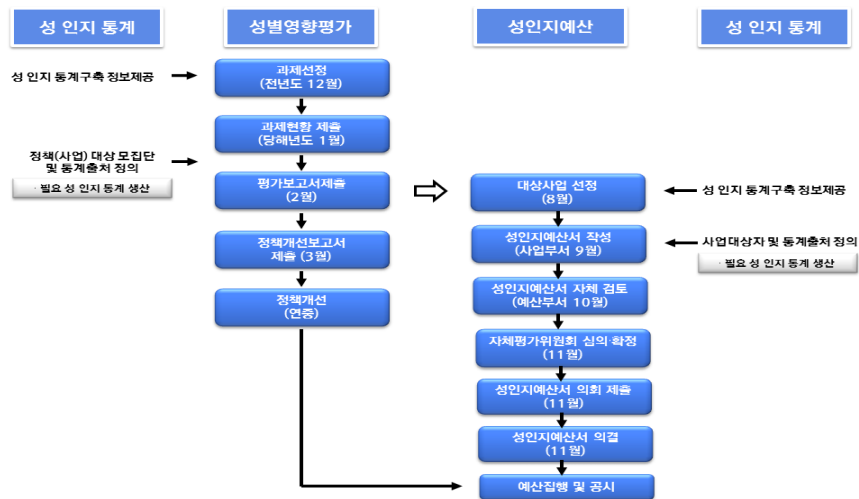
□ 성과목표(성평등목표)

성평등지표	목표치	산출근거

3. 지방자치단체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연계 방안

가. 3대 제도의 일정 연계2)

- 3대 제도의 연계가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함. 그 동안의 성별영향평가는 전년도 12월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었고, 다음해 2월에 성별영향평가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후에는 정책개선보고서 제출 등 정책개선에 일정이 집중되었음.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는 해당년도 8월에 대상사업이 선정되고, 9월부터 단계적으로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되어, 11월에 예산서의 부속서류로 지방의회에 제출됨.
-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서의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은 양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성 인지 통계의 구축 여부에 대한 검토임.
 - 특정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사업대상자(모집단), 사업수혜자, 예산배분과 관련된 성 인지 통계가 사전에 구축되어 있어야만 함.
 -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앞서 성 인지 통계 구축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미구축 성 인지 통계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음.



[그림 1] 일정 연계

2) 이 연구에서 성별영향평가 일정은 2011년을 기준으로 하였음.

나. 3대 제도의 대상사업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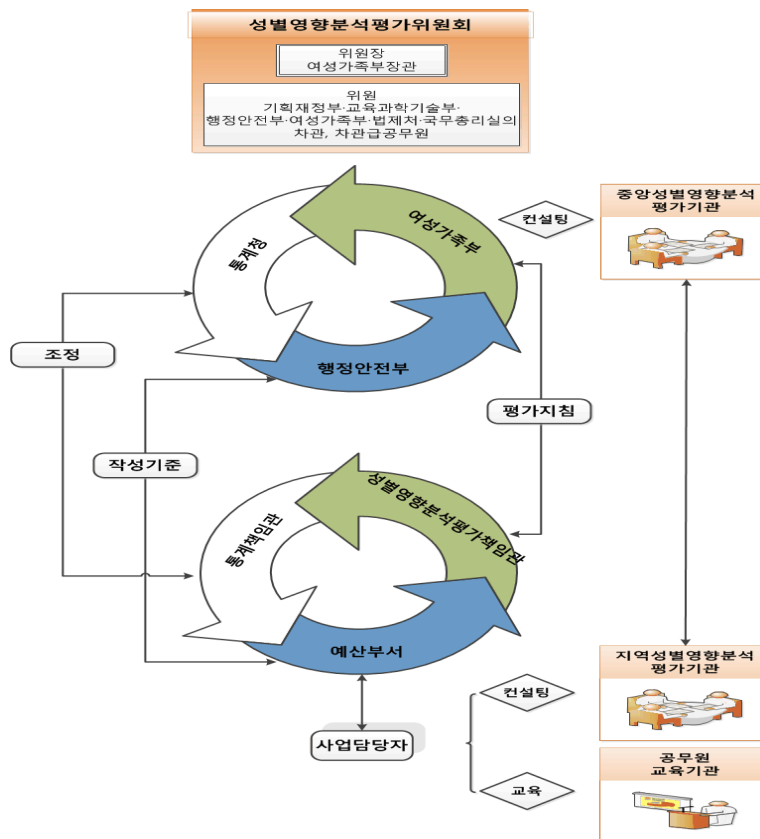
-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이 기존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뿐만 아니라 법령, 기본계획까지 확대되었음.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단위사업을 성별영향 분석평가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필수 대상사업 가운데 하나로 ‘최근 3년간의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을 설정하고 있음.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서가 단위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사업 수준에서 작성됨.
- 단위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배분 등의 성 인지적 개선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가능할 것임.

다. 3대 제도의 지표 연계

-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는 양대 제도의 지표를 매개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
 -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에는 “사업수혜”와 “예산배분”의 성별형평성이 포함되어 있음.
 -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항목에는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구분”으로 구성된 “성별 수혜분석”이 포함되어 있음.
- 이들 지표 및 작성항목과 관련하여 성 인지 통계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임.
 - 첫 번째는 “사업대상자”를 통계적으로 정의하고, 그에 따라 성별 구분 통계 등 성 인지 통계를 생산하는 것임
 - 두 번째로는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 배분의 성별 구분 통계의 구축임.

라. 3대 제도의 추진체계 연계

- 3대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각 제도의 추진체계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성 인지 통계는 통계청,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는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임.
-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성 인지 통계는 통계책임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 성인지예산서는 예산부서에서 총괄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성별영향평가 보고서와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사업 담당자 등을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전문가의 컨설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림 2] 추진체계 연계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5
II.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양식 및 지침(안)	7
1.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9
2. 지방재정과 성인지 예산제도	14
3.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및 지침(안) 개발	20
III. 지방자치단체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연계방안 ..	35
1. 연계 필요성	37
2. 연계의 법적 근거	41
3. 연계 형태	47
가. 3대 제도의 일정 연계	47
나. 3대 제도의 대상사업 연계	47
다. 3대 제도의 지표 연계	48
라. 3대 제도의 추진체계 연계	49
4.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인지 예산의 편성 가능성	54
가.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현황	54
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 사례	55

IV. 결 론	65
1. 요약	67
2. 결론	67
가. 3대 제도의 일정 연계	67
나. 3대 제도의 대상사업 연계	69
다. 3대 제도의 지표 연계	69
라. 3대 제도의 추진체계 연계	70
■ 참고문헌	73
■ Abstract	75

표 목 차

<표 II-1> 성인지 예산제도 시범사업을 위한 사전준비	20
<표 II-2> 성인지예산서의 서비스 사업과 내부운영사업	21
<표 II-3> 성인지예산서의 대상사업 구분	21
<표 II-4> 대상사업 선정 체크리스트	23
<표 II-5> 성인지예산서의 작성단계	26
<표 II-6> 성인지예산서 편제	28
<표 III-1>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예산사업 현황(2010년)	40
<표 III-2>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 인지 통계의 근거법	43
<표 III-3> 대상사업 연계	51
<표 III-4> 지표 연계	52
<표 III-5> 기관유형별 정책개선과제 제출기관 현황(2009-2010)	54
<표 III-6>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내용별 반영현황(2010) ..	55
<표 III-7>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과제(2010)	56
<표 III-8>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인지 예산편성 사례(2010) ·	63

그림 목 차

[그림 II-1]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흐름도	17
[그림 II-2]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연계구조	17
[그림 II-3] 제도운영 흐름도 및 담당부서	19
[그림 II-4] 성인지예산서 작성절차 및 운영방법	25
[그림 III-1] 3대 제도 연계의 법적 근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42
[그림 III-2] 일정 연계	50
[그림 III-3] 추진체계 연계	53
[그림 IV-1] 일정 연계	68
[그림 IV-2] 추진체계 연계	71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제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참여기관 및 평가대상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었으며 2012년 3월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2012년에는 중앙행정기관에서만 작성되었던 성인지예산서를 지방자치단체도 작성하게 된다. 이것은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2013회계년도 예산서부터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한편 2007년 통계법 전면개정을 통해 국가승인통계의 성별 구분과 성 인지 통계 생산의 법적 근거가 강화되었다.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적 통계를 작성할 경우, 성별로 주요 분석 단위로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2007년에 이어 2010년에는 통계법 일부 개정을 통해 통계책임관의 사무에 성별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이 추가됨으로써 성 인지 통계 생산의 제도적 요건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처럼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및 시행, 지방 성인지예산서 작성, 통계법 강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성인지예산서 작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서 연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2년 3월 시행예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9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 인지 통계를 중요한 수단으로 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에 대한 요구가 성별영향평가 보고서와 성인지예산서를 실제로 작성하는 사업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최근 들어 성별영향평가 사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준수라는 규범적 측면과 전담인력의 부재에 따른 업무 효율화 측면에서 두

4 ●●● 지방자치단체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연계방안 연구

제도의 연계에 대한 요구가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들 제도의 연계가 구체화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계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였다. 즉,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이전 성별영향평가의 법적 근거였던 여성발전기본법과 성인지 예산제도의 법적 근거였던 국가재정법은 각 제도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지만, 두 제도 연계에 대한 법규정은 갖고 있지 않다.

둘째, 각 제도 발전 정도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성별영향평가는 2004년 시범사업이 실시된 이후 2005년 본격 시행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 등으로 대상 기관 및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반면 성인지 예산제도는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9년에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가 최초로 작성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성인지 예산제도는 제도 도입 초기 상황에서 제도 정착 및 확산에 좀 더 비중을 두어 제도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현재 시점에서 성인지 예산제도는 연계보다는 제도 본연의 정착 및 확산에 좀 더 집중하여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연계에 대한 법적 요구와 현실적 요구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제도의 독자적인 발전이 진행될수록 제도 연계를 위한 행정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초기부터 성별영향평가와 성 인지 통계를 연계 운영함으로써 향후의 행정 비용 발생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업무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3대 제도 연계 경험을 축적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서 연계방안이 검토되었다. 그러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필요한 성 인지 통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두 제도의 효율적인 연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서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이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서의 연계를 위해 관련법 및 연계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겠다. 구체적으로 통계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지방재정법의 관련 내용을 검토한다.

둘째, 지방재정법 시행령(안)의 성인지예산서 필수요소, 지방자치단체 재정 구조 및 예산편성 지침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양식 및 지침(안)을 개발한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적용가능한 성인지예산서 작성 양식 및 지침(안)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한다.

셋째,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서 연계방안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일정, 대상사업, 지표, 추진체계의 측면에서 3대 제도의 연계방안을 검토한다.

나.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우선,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각종 문헌자료를 수집,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전문연구기관 등과 자문회의 개최하였다. 자문회의의 중요 내용은 연구내용 전반,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양식 및 지침(안),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시범 작성 대상사업(안), 정책 제언, 최종 보고서(안)에 대한 검토 등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지자체 공무원, 지방의회, 지자체 전문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연구의 시의성 및 연구성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 ●●● 지방자치단체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연계방안 연구

첫째, 성 인지 제도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제도의 성공적 시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제도 관련 자료를 산출하여, 관련분야 연구자 및 공무원의 업무 추진과 연구수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제도 연계 요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Best Practices를 제시함으로써 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양식 및 지침(안)

1.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9
2. 지방재정과 성인지 예산제도	14
3.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및 지침(안) 개발	20

1.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는 2013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일 반예·결산서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다(지방재정법 제26 조의 2, 제53조의 2신설, '11.2.2). 2012년에는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가 작 성되어야 하므로 지방재정 현실에 적합한 추진체계 및 작성양식, 지침 등의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상의 성인지예산서에 포함되는 필수적인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그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우선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가 가져야 할 기 본체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예산편성 : 성인지예산서의 작성

- 조직의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고, 조직의 장기적인 목표와 활동 및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성 인지적 활동전략 수립, 성평등 목표 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성과지표, 예산액, 성평등 기대효과, 성별 수혜분석 등을 제시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부속 서류로 제출

□ 예산심의

- 지방의회에서 성인지예산서 상에 작성된 성평등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 현하기 위한 성과지표 및 성별예산배분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의결

□ 예산집행

- 편성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 단체 재무회계규칙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 따라 집행하되, 성 인지적 관점에서 성인지예산서 상에 제시된 성평등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

□ **결산 및 심사 : 성인지결산서의 작성**

-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예산집행실적, 예산집행의 결과로 성평등 목표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달성되었는지 성평등 효과분석 결과를 작성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결산서와 동시에 작성하여 의회에 부속서류로 제출
- 지방의회에서 결산 심사 및 승인

□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

- 성인지결산서 상의 성평등 효과분석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 및 예산에 반영

위와 같은 예산주기의 기본체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 제도를 통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즉 자치단체 별로 수립하는 다음연도 주요업무계획 및 재정전망, 성평등적 재정 운용의 방향등을 고려한 예산의 편성이 가능해지게 된다.

또한 다음연도 예산사업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 고유의 성평등 목표와 연계하여 검토하고, 다년도 정책사업의 경우 연차별로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성과예산서의 정책사업, 단위사업, 성과목표, 성과지표와 성인지예산서의 성평등 전략, 성평등 목표, 성평등 지표 등과의 연계가 제안될 수 있다.

이제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다 자세히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와 제52조의 2에서는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에 대한 정의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성인지예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 첨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성인지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 첨부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성인지예·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은 2013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이 뒤따르고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의 2와 제63조의 2에서는 성인지예·결산서가 어

면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먼저 성인지예산서는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규모, 성인지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을 포함하게 된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을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성인지결산서는 성인지결산의 개요, 성인지예산의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를 포함하게 된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서와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을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성인지예산은 성 평등 진작을 위해 별도로 책정된 예산이 아니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미리 결정된 사업의 예산을 통칭한다. 따라서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규모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의 전반을 파악하기에 필요한 내용이 담겨지게 된다. 성인지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에는 각 대상사업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성평등 제고에 있어 기대되는 효과를 제시하게 된다. 성별 수혜 분석에는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의 성별분리통계와 남녀별 예산현황이 포함된다. 성과목표는 성별 수혜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도 내에서 부처의 성평등 목표와 연계하여 계량화된 목표를 설정한다. 즉 성평등 기대효과 및 본래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비율을 고려한 수치를 제시하게 된다.

성인지결산은 예산의 최종수혜자인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성 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가능하게 한다. 성인지결산의 개요를 통해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예산 집행결과에 대한 대략적 파악이 가능하다. 성인지예산의 집행실적을 세출예산현액 대비 분석할 수 있고,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 통계를 이용하여 성평등 효과분석을 작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집행실적과 성평등 효과분석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담당자가 평가를 작성한다.

위에서 제시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상의 성인지예·결산서의 구성요소는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양식에 담기게 되는데, 작성양식 및 작성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작성하는 성인지예·결산서의 작성기준 및 지침 등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 및 예산편성지침 분석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및 지침(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지방재정법령 규정 ▶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예산서”(性認知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8]

제53조의2(성인지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8]

<부칙> <법률 제10439호, 2011.3.8>

제2조(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결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인지예산서의 작성·제출,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인지결산서의 작성·제출은 각각 2013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 지방재정법령 규정 ▶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0조의2(성인지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예산서[이하 “성인지예산서”(性認知豫算書)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예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본조신설 2011.9.6]

제63조의2(성인지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결산서(이하 “성인지결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결산의 개요
2. 성인지예산의 집행실적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결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본조신설 2011.9.6]

<부칙> <대통령령 제23121호, 2011.9.6>

제3조(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및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각각 2013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2. 지방재정과 성인지 예산제도

(1) 지방재정과 성인지 예산제도의 관계

□ 지방재정

: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및 지출활동을 통칭한다.

□ 예산(서)

: 예산(서)는 단일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 동안 정부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수입(세입)과 지출내역(세출)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예정계획(서)이다.

□ 예산과정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은 예산안 편성 및 지방의회 제출,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확정을 거친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후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으로 단일 회계연도의 예산과정이 종료된다. 이러한 일련의 연속적인 순환과정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2011회계연도의 경우, 2011년도 예산집행과 함께 다음 연도인 2012년도 예산편성, 전년도인 2010년도 결산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 지방재정과 성인지 예산제도

: 성인지 예산제도(Gender Budgeting)는 각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재원조달 및 지출활동 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 과정에서 고려함으로써 지방재원이 효율적이고 성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의 특정범주가 아니라 성 평등한 자원배분의 과정이다.

(2) 예산의 편성절차

성인지예산서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 예산편성 및 심의일정

- ① 자치단체 예산(안)편성: 9-11월
- ② 예산(안) 의회제출(지방자치법 §127①)
 - 시·도 : 11월 11일까지(회계연도개시 50일전)
 - 시·군·자치구 : 11월 21일까지(회계연도개시 40일전)
- ③ 지방의회 심의·의결(지방자치법 §127②)
 - 시·도 : 12월 16일까지(회계연도개시 15일전)
 - 시·군·자치구 : 12월 21일까지(회계연도개시 10일전)
- ④ 의결예산이송(의회 → 단체장) : 의결 후 3일 이내(지방자치법 §133①)
- ⑤ 편성결과 보고 및 고시 : 이송 받은 즉시(지방자치법 §133②)
(보고 : 시·도 → 행정안전부, 시·군·구 → 시·도)

□ 예산편성 운영방법

- ① 편성과정 : 방침시달(예산) → 예산요구(사업부서) → 조정(예산 부서)
→ 의회제출(자치단체장) → 의회 심의·의결 → 확정
- ② 편성내용 : 분야·부문·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 ③ 예산요구
 - 예산부서(기획관리실장, 기획실장)의 예산편성 방침을 통보 받은 각 실·국·과장(청·소의 장 포함)은 지정된 기일까지 세입·세출 예산 요구서와 사업관리카드(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를 작성하여 예산 부서에 제출
 - 세입예산요구 : 회계별로 세입예산요구서를 작성
 - 세입예산은 세입주관부서에서 각 부서의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
 - 세출예산요구 : 세출예산요구서를 작성하되, 세부사업단위로 편성목·통계목·산출 근거를 작성

16 ●●● 지방자치단체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연계방안 연구

- 성과예산서 : 사업예산을 조직의 미션,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된 성과계획서와 연계하여 작성
- 성인지예산서 : 세출예산요구서 중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되, 세부사업단위로 작성
- 기타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명시이월비 설명서, 계속비사업 조서 등

(3) 성인지예산서의 개념 및 특징

□ 개념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다.
(국가재정법 26조 성인지예산서의 작성, 지방재정법 36조의2 성인지예산서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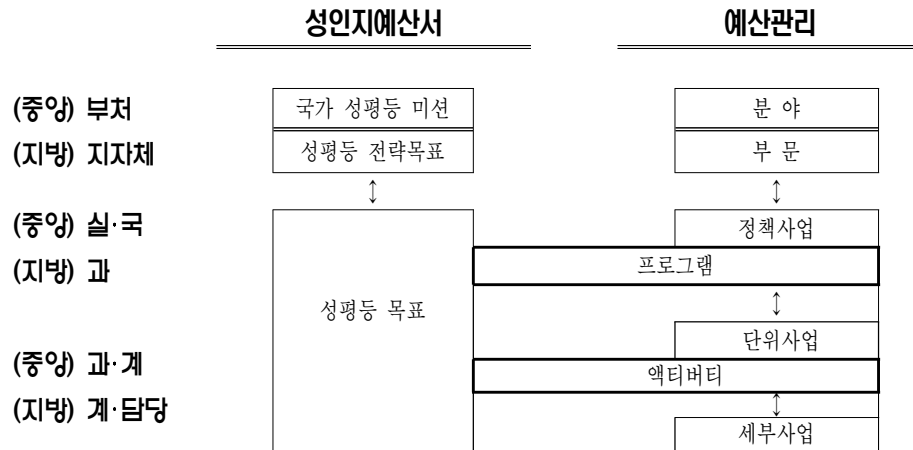
□ 특징

: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통하여 예산과 성평등 효과분석을 직접 연계할 수 있다.

※ 정부정책이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투입뿐 아니라 법률, 제도, 태도변화 등 비재정적인 투입물과 복합적으로 작용

: 일반예산 편성 및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예산목적과 집행의 결과에 입각한 성평등 효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낼 수 있다.

다음의 [그림 II-1]은 성인지예산서가 기존 예산관리의 구성에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요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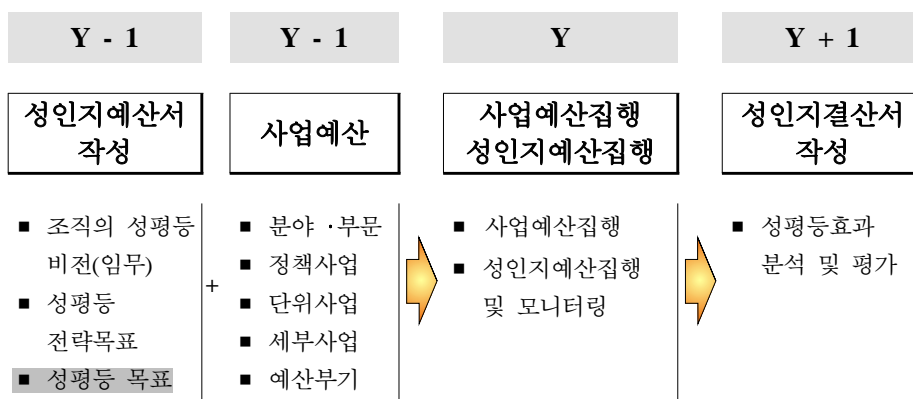


[그림 Ⅱ-1]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흐름도

(4) 성인지예산 운영체계

□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연계구조

다음의 그림에는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이 예산집행과 맞물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담겨져 있다. 예를 들어, 2012년에는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가 일반사업예산과 함께 작성되며, 2013년도에 집행된 성인지예산 및 일반사업 예산에 대한 성인지결산서와 결산보고서가 2014년도에 작성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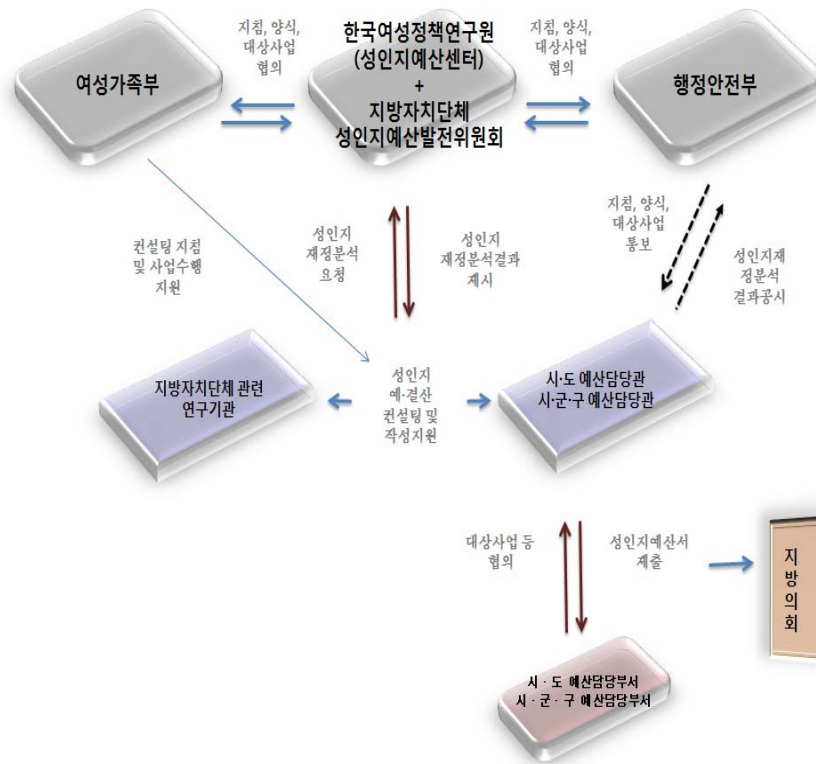
[그림 Ⅱ-2]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연계구조

□ 성인지예산서 작성 추진체계

아래의 그림에는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의 흐름과 담당부처 및 부서가 담겨져 있다. 먼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된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작성지침, 대상사업을 협의함에 있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예산센터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발전위원회(가칭)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해진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작성지침, 대상사업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각 시·도 예산담당관 및 시·군·구 예산담당관에게 통보된다. 각 시·도 예산담당관 및 시·군·구 예산담당관은 각 실·국에 성인지예산 편성운용방침을 일반예산편성방침과 함께 통보하고, 각 실·국은 세출예산요구서 중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되, 세부사업 단위로 작성한다. 이렇게 작성된 성인지예산서는 예산부서에 의해 일차적으로 검토되며, 자체평가위원회에 상정되어 이차적으로 심의 및 확정절차를 밟게 되며 절차가 모두 끝나면 지방의회에 제출된다.

각 시·도 예산담당관 및 시·군·구 예산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으로부터 성인지예산서 작성 컨설팅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은 이에 필요한 성 인지적 재정분석 등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발전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한 성 인지적 재정분석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 즉,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는 각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에게 컨설팅 지침을 제공하며 사업수행을 지원하게 된다.



[그림 Ⅱ-3] 제도운영 흐름도 및 담당부서

□ 성인지예산서 시범사업을 위한 사전준비

2011년도부터 성인지예산서 시범사업 준비를 하여왔으며 사전준비를 위한 단계로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선도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선도기관으로 광역단체인 서울, 부산, 강원을 먼저 선정하고 성별영향평가를 체계적이며 효과적으로 실시해 온 기초단체 몇 곳을 선정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의 협의를 거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시스템 상의 성인지예산영역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2012년도 상반기에는 행정안전부의 주도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보완하여 2012년도 하반기에는 전국의 광역 및 기초단체가 2013회계연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성인지 예산제도의 본격적 운영을 도모한다.

〈표 II-1〉 성인지 예산제도 시범사업을 위한 사전준비

구 분		시범사업을 위한 사전준비(2011)	시범사업 및 '13회계연도 성인지예산서 작성(2012)
대상 기관	광역	성인지예산서 시범작성을 위한 매뉴얼 마련	(상반기) 성인지예산서 시범 작성 (하반기) 성인지예산서 작성
	기초	성인지예산서 시범작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	(상반기) 성인지예산서 시범 작성 (하반기) 성인지예산서 작성

3.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및 지침(안) 개발

1절에서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기본체계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상의 성인지 예·결산서의 구성요소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2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 및 예산편성지침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 및 양식과 지침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작성범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대상회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함하도록 한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은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편의 및 필요에 따라 정책사업, 단위사업을 기준으로도 작성이 가

능하도록 한다. 다음의 <표 Ⅱ-2>에 나와 있듯이 서비스 사업과 내부운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먼저 서비스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 지역개발, 지역경제, 치안 등과 관련이 있는 사업이다. 내부운영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내 행정조직의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타 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하며, 일반행정과 관련이 있다.

<표 Ⅱ-2> 성인지예산서의 서비스 사업과 내부운영사업

사업구분	정 의	대상자	주요기능
서비스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그 자체가 독립적인 서비스 수행 	자치단체 주민	사회복지 지역개발 지역경제 치안 등
내부 운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단체 행정조직의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타 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 지원 	행정조직	일반행정 등

이 두 가지 사업에 해당되지만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제외대상은 행정운영 경비나 재무활동 등 비사업적 성격을 가진 경우이다. 또한 예비비 등 성평등 목표를 정하기 곤란하거나 징수교부금 등 사업경비가 아니지만 분야와 부문이 독립되어 불가피하게 정책사업으로 구조화된 정책사업 등은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제외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다음의 <표 Ⅱ-3>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을 구분할 수도 있다.

<표 Ⅱ-3> 성인지예산서의 대상사업 구분

구분	대상사업	비 고
필수	○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08~'12)사업	○ 여성발전기본법(§7)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
	○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 매년 7.31까지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 포함 통보

구분	대상사업	비 고
선택	○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 노인일자리 확충사업 등
	○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 단체장 공약사업 등

위의 <표 II-3>에 따르면 대상사업을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하고 필수에는 국가 성인지예산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여성가족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선택에는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과 단체장 공약사업 등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해당된다. 여기에서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제외대상이 되는 사업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징수교부금 등이다.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각계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가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과 비슷한 류의 사업, 사회복지사업, 공약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다양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성인지 예산제도 본래 목적을 고려하여 예산배분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즉,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권익증진 등을 통해 양성평등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 고용, 보육 관련 사업 등과 남녀의 상이한 정책욕구에 부합하는 예산 배분을 통해 양질의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려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을 모든 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숫자가 많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인지 예산제도의 위상이 확립될 수 없고 제도도입 본래의 취지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 제도의 초기 시행에서 있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모든 사업에서 겪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에 있어 보다 심도 깊은 논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Ⅱ-4〉 대상사업 선정 체크리스트

단계		지표														
1	성평등 목표에 대한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사업이 국가의 성평등 목표에 기여하는지를 검토														
2	현재 상황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금까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성평등에 기여하였는가?<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식 수준과 성평등에 기여한 정도를 개괄적으로 측정- 0점부터 5점까지로 구성된 다음의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박스에 표시) <table><tr><th>척도</th><th>내용</th></tr><tr><td>0</td><td>한 쪽 성에 편중되어 있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음</td></tr><tr><td>1</td><td>성평등에 대한 고려가 어느 정도는 있음</td></tr><tr><td>2</td><td>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음</td></tr><tr><td>3</td><td>광범위한 부분 속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td></tr><tr><td>4</td><td>성별영향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음</td></tr><tr><td>5</td><td>이 사업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평등 관점을 가지고 있음</td></tr></table>	척도	내용	0	한 쪽 성에 편중되어 있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음	1	성평등에 대한 고려가 어느 정도는 있음	2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음	3	광범위한 부분 속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4	성별영향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5	이 사업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평등 관점을 가지고 있음
척도	내용															
0	한 쪽 성에 편중되어 있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음															
1	성평등에 대한 고려가 어느 정도는 있음															
2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음															
3	광범위한 부분 속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4	성별영향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5	이 사업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평등 관점을 가지고 있음															
4	장점과 장애요인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의 성평등성을 강화할 때의 장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장애요인은 무엇인가?<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점과 장애요인의 체크리스트 활용														
5	개선의 가능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선의 가능성을 0-5점 척도 상에서 평가<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한 시간, 업무량, 자원의 배분 가능성을 고려하여 평가(박스에 표시) <table><tr><th>척도</th><th>내용</th></tr><tr><td>0</td><td>개선의 여지가 없음</td></tr><tr><td>1</td><td>거의 없음</td></tr><tr><td>2</td><td>없는 편임</td></tr><tr><td>3</td><td>있음</td></tr><tr><td>4</td><td>있는 편임</td></tr><tr><td>5</td><td>상당히 있음</td></tr></table>	척도	내용	0	개선의 여지가 없음	1	거의 없음	2	없는 편임	3	있음	4	있는 편임	5	상당히 있음
척도	내용															
0	개선의 여지가 없음															
1	거의 없음															
2	없는 편임															
3	있음															
4	있는 편임															
5	상당히 있음															
6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선 계획을 수립<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당자와 시행 완료시기 등을 포함(체크 박스에 표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실제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를 검토<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과 성평등 증진의 연관성- 직접 조건 외의 외부조건- 재정조건 및 시간- 직원들의 역량, 개선정도														

위의 <표 II-4>는 대상사업 선정 체크리스트이다.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선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준거점이 되어줄 수 있다.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을 선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 방법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작성기준

□ 기본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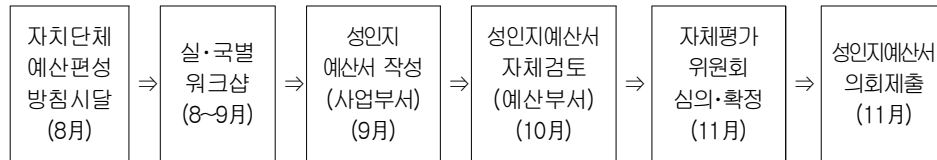
자치단체별로 수립하는 「차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차년도 재정전망 및 성평등 재정운용 방향」을 고려한 성인지예산서 체계를 구성하도록 한다. 특히 차년도 예산사업에 대하여는 시기적으로 미리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조직 전체적인 성평등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하며, 다년도 정책사업의 연차별 성평등 목표치 등 중·장기적 관점을 포함한다.

□ 인과관계유지

성인지예산영역과 예산관리영역 간의 인과관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 1) 성과예산서의 정책사업, 단위사업, 성과목표, 성과지표와 성인지예산서의 성평등 목표와의 연계를 검토한다.
- 2) 부서별 임무, 성평등 목표, 성평등 지표와 예산사업 간에 정확한 인과관계를 설정한다.
- 3) 성과관리 대상인 정책사업을 성인지예산서 상의 부서별 성평등 목표와 연계가 되도록 예산사업을 재구조화할 수 있다.

(3) 작성절차



[그림 Ⅱ-4] 성인지예산서 작성절차 및 운영방법

행정안전부로부터 전달받은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과 매뉴얼 등을 통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연도 성인지예산서 작성방법과 절차에 대해 숙지할 수 있다.

「성인지예산 편성운영방침」은 각 실·국에 시달되며, 각 실·국에서는 워크숍 등을 거쳐 다음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이와 연계하여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에 따라 실·국(과)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e-호조 시스템에도 입력을 하도록 한다.

예산부서는 실·국(과)별 성인지예산서를 1차적으로 자체검토한 후에 2차적으로 자체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는다. 단체장의 결재 후에 지방의회에 성인지예산서를 제출하게 된다.

(4) 작성단계

다음의 <표 Ⅱ-5>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서에서 성인지예산서를 어떤 단계를 거쳐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국가 성인지예산서 작성단계와 비교하여 제시되어 있다.

〈표 II-5〉 성인지예산서의 작성단계

항목		내용	지방	국가	영역
1단계: 성평등 유형 및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정책(사업)과 관련된 성불평등 문제의 성격에 대한 정의 - 예상되는 성평등 기대효과 제시 	-	-	성별 정책 수요 차이 파악
2단계: 사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유형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 제시 : 대상집단 인구분포 : 여성과 남성의 정책욕구의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 ※ 국가기초통계자료 및 기존 조사·연구자료의 활용 	① 사업 대상자	① 사업 대상자	
3단계: 정책 수혜 분석	정책 과정 참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 참여자의 성비 	② 사업 수혜자 ③ 예산 현황	② 사업 수혜자 ③ 예산 현황	대상 사업의 효과 분석
	수혜자의 성별 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수혜자의 성별분포 	-	-	
	1인당 세출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의 성별 배분 	-	-	
4단계: 정책수혜분석에 대한 원인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수혜분석에 대한 원인진단 	-	-	
5단계: 개선방안 및 예산소요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한 개선방안의 목록과 장단점 분석 - 장기적 개선방안, 단기적 개선방안 등 실현가능한 개선방안 도출 - 성별통계생산 계획 - 소요예산 내역 	-	-	대안 마련
6단계: 성평등목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개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평등목표(성과목표) 설정 	④ 실·국의 성평등 목표 ⑤ 자치단체의 성평등목표	④ 성과목표 (성평등목표)	

1단계에서는 각 사업에 관련되어 성불평등한 점이 있는지 검토하고 성불평등 문제를 유형화한다. 해당 사업에 대해 성인지적 분석을 하게 될 경우 성평등에 있어서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하게 된다.

2단계에서는 사전조사를 통하여 각 사업에 관련되어 성불평등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통해 제시한다. 정책의 대상집단에 대한 인구분포, 여성과 남성의 상이한 정책욕구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국가기초통계자료 및 기존 조사통계자료 등을 사용하여 확보한다. 즉, 사업의 대상자를 파악하고, 특히 사업대상자를 성별로 구분하게 된다.

3단계에서는 정책의 성별 수혜분석을 하게 된다. 사업대상자와는 구분하여 실제로 정책 및 사업의 혜택을 입은 사업수혜자의 통계를 제시해야하며 사업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성별로 사업수혜자를 구분하여 수치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정책 수혜자의 성별분포와 예산의 성별배분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게 된다.

4단계에서는 정책수혜분석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게 된다. 즉, 사업대상자의 성별분포와 사업수혜자의 성별분포가 다른 경우, 혹은 사업대상자의 성별분포와 예산의 성별배분분포가 다른 경우, 그 원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5단계에서는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정책의 성별 수혜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성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과 장단점을 분석하며, 장기적·단기적 개선방안 등 실현가능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6단계에서는 성평등 목표를 설정한다.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평등 목표와 성과목표를 설정한다.

(5) 성인지예산서 편제

다음의 <표 II-6>은 성인지예산서의 편제를 기존의 세입·세출예산서 및 성과예산서와 비교하여 보여준다.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통해 I-3. 시·도/시·군·구의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예산 편성의 방향, I-4.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총괄표, II-1. 성인지예산 규모, II-2. 성평등 목표 별 성인지예산 규모, III-1. 부서별 성인지예산서 등의 항목을 통해 사업예산에 대한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

〈표 II-6〉 성인지예산서 편제

기 존 (세입·세출예산서, 성과예산서)	성인지예산서
I. 도정현황	I. 시·도/시·군·구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예산 총괄표
I-1. 내년도 재정전망 I-2. 시·도/시·군·구정 방향 I-3. 조직 I-4. 인력현황 I-5. 시·도/시·군·구 비전과 전략목표 I-6. 성과계획 총괄표	I-1. 내년도 재정전망 I-2. 시·도/시·군·구정 방향 I-3. 시·도/시·군·구의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예산 편성의 방향 I-4.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총괄표
II. 세입·세출예산서	II. 성인지세출예산서
II-1. 예산총칙 II-2. 예산규모 가. 회계별 예산규모 나. 세입총괄표 다. 세출총괄표(기능별) 라. 세출총괄표(조직별) 마. 세출총괄표(성질별) II-3. 세입예산서 II-4. 세출예산서 II-5. 채무부담행위조서 II-6. 계속비사업조서 II-7. 명시이월사업조서	II-1. 성인지예산 규모 가. 회계별 예산규모 나. 세출총괄표(기능별) 다. 세출총괄표(조직별) 라. 세출총괄표(성질별) II-2. 성평등 목표별 성인지예산 규모
III. 세입·세출사업명세서	III. 성인지세출사업명세서
III-1. 세입사업명세서 III-2. 부서별 성과예산서 ※ 성과예산서 작성체계 및 해설 ① 부서별 성과계획 부서임무, 조직현황, 예산규모,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② 세출사업명세서 III-3. 부문·전략·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III-1. 부서별 성인지예산서 가. 부서별 성인지예산 현황 나. 성인지예산사업 설명자료

《 성인지예산서 제출서류 주요서식 》

1. 성인지예산서

I. 시·도/시·군·구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예산 총괄표

I - 1. 내년도 재정전망

I - 2. 시·도 재정운영 방향

I - 3. 시·도/시·군·구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예산 편성의 방향

I - 4.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총괄표

II. 성인지세출예산서

II- 1. 성인지예산 규모

가. 부서별 성인지예산 현황

나. 성인지예산 사업 설명자료

다. 부서별 성인지예산 현황

라. 성인지예산 사업 설명자료

II- 2. 성평등 목표별 예산 규모

III. 성인지세출사업명세서

III- 1. 부서별 성인지예산서

가. 부서별 성인지예산 현황

나. 성인지예산 사업 설명자료

II.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양식 및 지침(안) ●●● 31

[illegible]

나. 성인지예산 사업 설명자료(서식)

세부사업 : ○○-○○

○○세부사업명

회계연도 : ○○○○년	회 계 : 일반/공기업/기타/기금
조 직 : ○○실국 ○○과팀	기 능 : ○○분야 ○○부문
정책사업 : ○○정책사업명	단위사업 : ○○단위사업명
성인지 사업 영역 : 분야 - 부분 - 정책 - 대과제 - 중과제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사업내용, 사업위치, 추진근거, 추진경위, 추진계획

□ 소요재원

(단위: 천원)

재 원 별	전년도 예산액	당해연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 산 총 계				%
국 고 보 조 금				%
균 특 보 조 금				%
기 금 보 조 금				%
특 별 교 부 세				%
분 권 교 부 세				%
시 도 비				%
시 군 구 비				%
지 방 채				%
기 타 (예 산 외)				%
기초자치단체부담금 (시 군 구 비)				%
채 무 부 담				%
민 자				%
재 정 용 자 금				%
기 타				%

※ 전년도예산액은 당초예산 기준

□ 성별수혜

○ 대상자 수 : 이호조 시스템에서 선택, 코드(개인1, 가구, 집단2)

	2010	2011	2012
여성			
남성			
공동(양성평등)			

○ 수혜자 수(개인1,가구,집단2/ 1차수혜a, 2차수혜b, 3차수혜c, 불특정수혜d)

	2010	2011	2012
여성			
남성			
공동(양성평등)			

* 2010년은 집행기준, 2011년, 2012년은 추정치를 작성

○ 성별 소요재원

	2010	2011	2012
여성			
남성			
공동(양성평등)			

* 2010년은 집행기준, 2011년, 2012년은 추정치를 작성

□ 성평등기대효과

□ 성과목표(성평등목표)

성평등지표	목표치	산출근거

III

지방자치단체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연계방안

1. 연계 필요성	37
2. 연계의 법적 근거	41
3. 연계 형태	47
4.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인지 예산의 편성 가능성	54

1. 연계 필요성³⁾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면서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 장에서는 3대 제도 연계 방안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기에 앞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연계에 대한 기존 논의를 간단하게 살펴볼 것이다. 이처럼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을 중심으로 연계의 필요성을 우선 살펴보는 것은 성 인지 통계가 두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제도 연계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3대 제도의 연계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3대 제도 연계에 따라 예상되는 효과를 기존 성별영향평가 개선실적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지방재정법』이 2011년 3월에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또한 9월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면서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가 법령과 계획,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을 하도록 하고 있다면, 성인지 예산제도는 성평등 정책을 위한 예산사업 뿐 아니라 일반 예산사업에 대한 성인지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다. 즉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는 모두 예산사업에 대한 성인지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다.

예산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중복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를 연계시킴으로써 성 주류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정책개선을 위해 예산반영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성인지예산서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정책 개선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부기관이 성 평등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성 평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 주류화 전략을 수행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두 제도는 성 평등과 무관해 보이는 고유의

3) 이 장은 김경희 외(2011),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Ⅳ): 성별영향평가 중심의 성 주류화 전략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췌 요약한 것임.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성 평등 관점의 분석을 통하여 의도하지 않은 성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이처럼 두 제도가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분석대상 정책의 특성과 적용되는 정책과정의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성인지 예산제도가 특별히 예산을 수반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하고 예산과정에 성 평등 관점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성별영향평가는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까지도 포괄하며 예산과정 이외의 모든 정책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볼 때 ‘예산사업에 대한 성인지 분석’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가 함께 공유하는 부분이 될 것이다. 예산은 국가정책의 핵심수단이며,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성 평등 관점의 분석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성 평등에 대해 가지는 잠재력은 보다 직접적이면서도 강력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분석이 전제되어야 하며, 분석결과를 실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와 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마경희 외, 2009).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성인지 예산제도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전문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김경희 외, 2009; 박재규 외, 2009; 김경희 외, 2007; 김양희 외, 2007). 두 제도를 연계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과제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대상과제가 모두 예산사업에 대한 성 인지 분석을 하고 있으나 상호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성별영향평가는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래 2004년 85개, 2006년 314개, 2007년 720개, 2008년 1,531개, 2009년 1,908개, 2010년 2,401개로 대상과제가 매년 크게 증가하였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2006년 「국가재정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09년 첫 번째 성인지 예산서가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제도 시행을 시작하였다. 그 준비를 위해 2008년도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한 바 있으며, 2009년에는 29개 기관 195개 사업, 2010년에는 34개 기관 245개 사업이 성인지 예산제도의 대상과제로 포함되었다(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9). 성별영향평가는 수행기관이 중앙행정기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있지만 성인지 예산제도는 현

재까지 중앙행정기관만이 참여하였다. 따라서 성인지예산의 대상과제에는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한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의 일부만이 포함되었다.

그런데 성인지예산의 대상과제 단위가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어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중 예산사업이면서 세부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많이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성인지예산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대상과제 단위가 세부사업 뿐 아니라 성별영향을 분석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단위사업, 정책사업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두 제도를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면서 성별영향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지방자치단체들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활동을 통해서 성 주류화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성별영향평가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활발한 참여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성별영향평가 과제가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그동안의 성별영향평가제도 시행을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분석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고 있으며, 분석결과에 기초한 정책개선안 도출 및 환류의 측면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평가결과 정책개선을 위해 예산에 반영한 사례는 거의 없으며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는 성별영향평가가 예산의 편성, 심의·의결, 집행, 결산 등 예산과정과 별개의 과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양질의 성별영향평가가 수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분석의 결과가 예산을 통해 환류 되지 못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산은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지표이므로 성 평등 관점의 분석과 제도개선을 위한 잠재력이 매우 큰 영역이다. 성 주류화의 도구인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가 모두 예산사업에 대한 성인지 분석에 기초하여 정책개선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성평등 목표를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두 제도의 목적은 동일하다(마경희 외, 2009). 이러한 관점에서 두 제도를 연계시키는 작업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보고서에서 발견되는 성별 수혜분석 등 공통된 내용의 중복성을 줄여 두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제도가 설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성별영

향평가를 성인지 예산제도와 연계시키는 작업은 성 평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성 주류화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두 제도의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예산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전체 대상과제 1,834개 중 1,754개가 예산사업으로 전체의 9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의 대부분이 예산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예산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예산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인지예산서에 성별영향평가의 결과와 예산요구의 근거를 제시하고 정책개선을 위해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가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표 Ⅲ-1〉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예산사업 현황(2010년)

(단위: 개, %)

구 분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업	지방자치단체 비예산사업	계
사업수	2,213	101	2,314
비율	95.6	4.4	100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 「2010 성별영향평가 결과보고서 DB」, 내부자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성 주류화 정책의 환경이 변화될 것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가 예산사업을 포함한 일반 정책에 대해 성인지 분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제도를 연계시킬 필요성이 높아졌다. 성별영향평가가 법령 등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까지도 포괄하며 예산과정 이외의 모든 정책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적용되는 것과 달리 성인지 예산제도는 특별히 예산을 수반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하고 예산과정에 성 평등 관점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며, 동시에 중복되는 부분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중복성을 줄이면서 지역의 성 주류화 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방안을 대상사업, 추진절차, 분석기법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연계의 법적 근거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제도(이하 3대 제도) 연계의 필요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다. 예컨대 개념적인 측면에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가 성 주류화의 대표적인 도구라는 의미에서 연계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업담당자의 실무적인 입장에서 상호 중복되는 지표를 사용하는 두 제도를 연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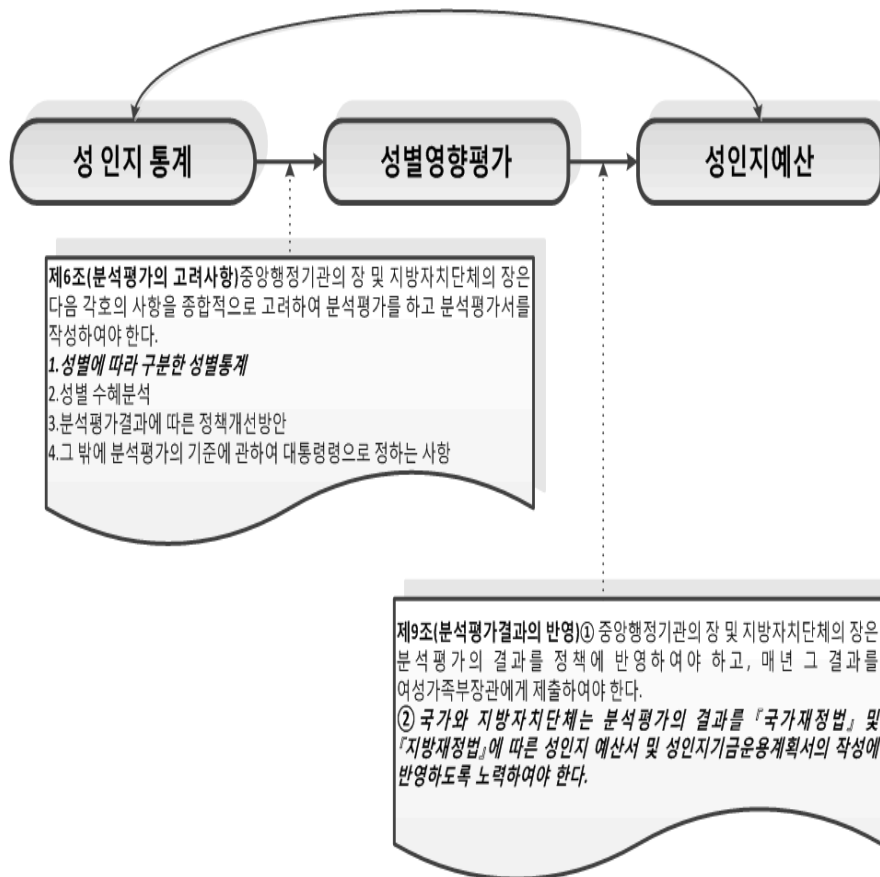
이처럼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제도 연계의 필요성이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었지만 그 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것이 현실이다. 반면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정과 함께 이들 3대 제도 연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6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고려사항 가운데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이다. 즉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시를 위해 성별통계, 성 인지 통계가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므로 이들 일차적인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6조에 따라 성 인지 통계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연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의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9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해 작성하는 성인지예산서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법적 연계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는 성 인지 통계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성 인지 통계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연계,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서의 연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성 인지 통계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국가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성 인지 통계 구축 요구는

성 인지 통계와 성인지 예산제도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3대 제도의 법적 근거는 다음의 [그림 Ⅲ-1]에서와 같이 제시했지만 이들 제도의 명시적인 연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Ⅲ-1] 3대 제도 연계의 법적 근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표 Ⅲ-2〉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 인지 통계의 근거법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여성발전기본법	통계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법	제13조(여성 관련 문체의 조 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 기 위하여 필요하면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 와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 다.<개정 2010.1.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보체 계를 구축하여 여성 관련 정 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개정 2010.1.1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 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 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 단 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 은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 여 소속 직원 중에서 통계책 임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지정대상자의 범 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1> 3. 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로 구분한 성별통 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무 ①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사 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제5조(분석평가 대상) ① 중 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 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 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 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 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석 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26조(성인지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 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한 보고서(이하 ‘성인지예산 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 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 해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 다.<신설 2010.5.17> 제6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 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 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 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 표, 성별 수해분석 등을 포함 하여야 한다. ③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 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 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 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 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8]

44 ●●● 지방자치단체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연계방안 연구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여성발전기본법	통계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조신설 2010.5.17>	
시 행 령		제25조(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9.7.1> 3. 통계작성의 사항. 다만, 작성의 사항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한다. 4. 통계작성의 대상. 다만, 작성의 대상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한다.	제2조(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제4항에 의한 분석평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 관련성을 검토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의한 대상 정책을 선정한다. 이 경우 여성발전기본법 제6조에 의한 적극적 조치의 시행 및 같은 법 제7조에 의한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시책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를 제외할 수 있다.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 2.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이하 “제·개정 자치법규안”이라 한다)	제9조(성인지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 법 제26조에 따른 성인지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2008.2.29, 2009.3.25, 2010.7.9>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규모 2의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본조신설 2011.9.6]	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예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본조신설 2011.9.6]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여성발전기본법	통계법		국기재정법	지방재정법
			<p>「성별영향분석평가법」</p> <p>3. 법령상 수립 근거가 있는 기본계획</p> <p>4.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관리과제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의 세부사업</p> <p>5. 기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대상 정책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정책</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 관련성이 인정되는 대상 정책 선정 결과를 제4항에 의한 분석평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받은 대상 정책 선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4항에 의한 분석평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p> <p>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p>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여성발전기본법	통계법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연도의 분석평가 실시를 위한 지침(이하 “분석평가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12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3. 연계 형태

가. 3대 제도의 일정 연계

3대 제도의 연계가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그 동안의 성별영향평가는 전년도 12월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다음해 2월에 성별영향평가보고서가 제출되고, 이후에는 정책개선보고서 제출 등 정책개선에 일정이 집중되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는 해당년도 8월에 대상사업이 선정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통상적인 예산서 작성 일정에 따라 9월부터 단계적으로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되어, 11월에 예산서의 부속서류로 지방의회에 제출된다.

기존의 성별영향평가가 전년도부터 시작되어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일정 이전에 완료되므로 두 제도의 일정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최근 성별영향평가 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예산서 작성 주기를 고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서의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은 양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성 인지 통계의 구축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특정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사업대상자(모집단), 사업수혜자, 예산배분과 관련된 성 인지 통계가 사전에 구축되어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앞서 성 인지 통계 구축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미구축 성 인지 통계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 3대 제도의 대상사업 연계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이 기존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뿐만 아니라 법령, 기본계획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단위사업을 성

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필수 대상사업 가운데 하나로 ‘최근 3년간의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서가 단위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사업 수준에서 작성된다.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과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특징은 두 제도의 연계의 긍정적인 조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단위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배분 등의 성인지적 개선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가능할 것이다.

반면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특정 연도에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은 연계과정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성 인지 통계 구축 정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단위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와 관련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 3대 제도의 지표 연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는 양대 제도의 지표를 매개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가장 최근에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에는 “사업수혜”와 “예산배분”의 성별형평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항목에는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구분”으로 구성된 “성별 수혜분석”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사업수혜”와 “예산배분”의 성별 형평성은 성인지예산서의 “성별 수혜분석”이 연계의 고리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업수혜 인원, 개인별로 배분된 예산에서의 성별 분포(성별 통계)를 통해 예산 배분의 성별 형평성을 두 제도가 동시에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지표 및 작성항목과 관련하여 성 인지 통계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사업대상자”를 통계적으로 정의하고, 그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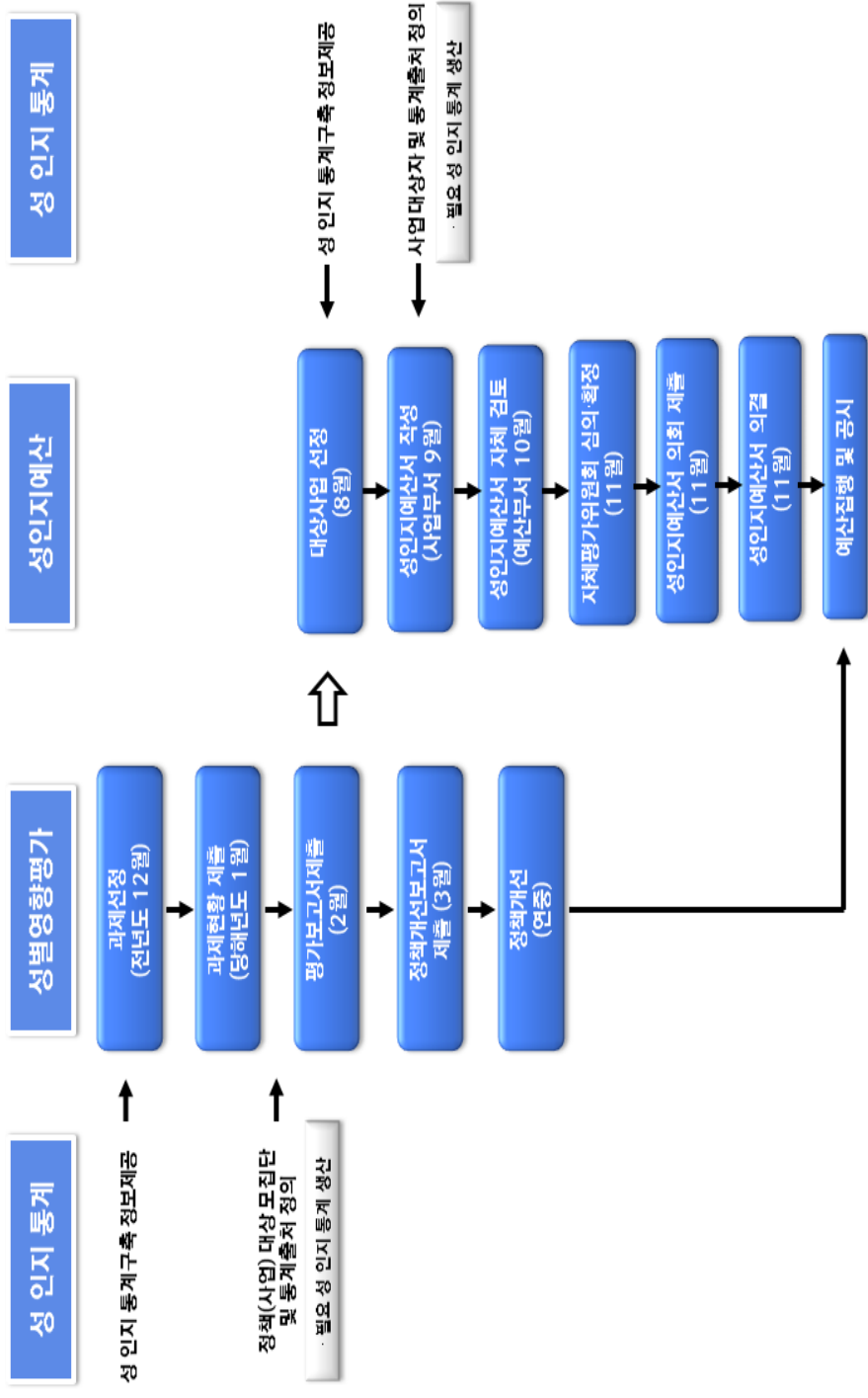
성별 구분 통계 등 성 인지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다. 사업담당자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본인이 담당하는 사업의 사업대상자를 특정화하여 정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별 구분 통계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담당 공무원은 성별영향분석평가지원기관 등의 전문가로부터 지속적인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 배분의 성별 구분 통계의 구축 여부이다. 사업대상자 통계의 경우, 현실적으로 시·군·구 수준에서 성별로 구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승인통계가 제한되어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사업수혜자와 예산 배분과 관련된 성별 구분 통계는 사업담당부서 등에서 일관되게 생산, 구축할 필요가 있다.

라. 3대 제도의 추진체계 연계

3대 제도의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각 제도의 추진체계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성 인지 통계는 통계청,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는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성 인지 통계는 통계책임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 성인지예산서는 예산부서에서 총괄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서는 동일한 사업담당자가 수행하게 된다. 즉 실제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사업담당자는 동일인인 반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이들 제도의 담당부서가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사업담당자는 이들 3개 담당부서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전문가의 컨설팅 등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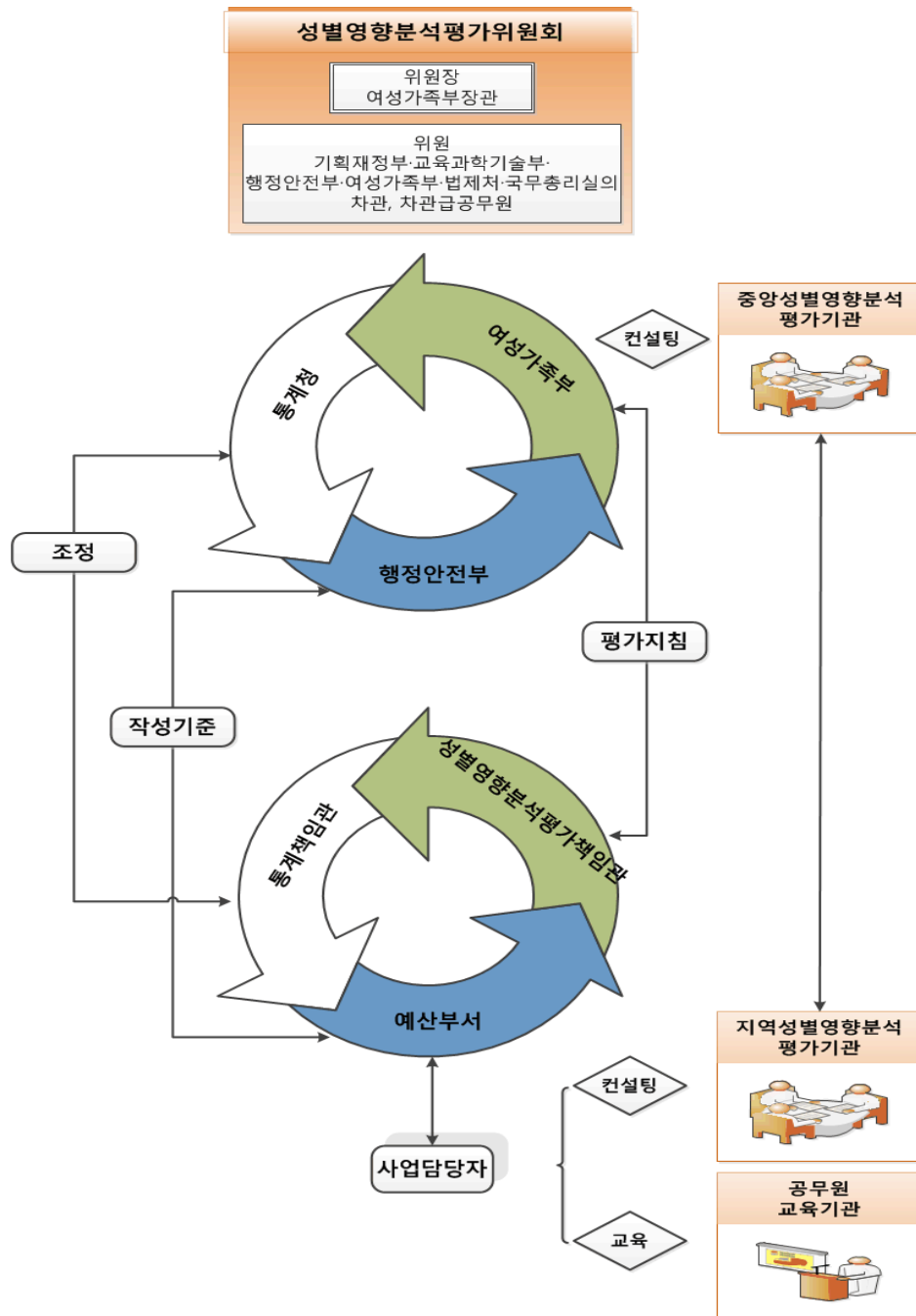
[그림 Ⅲ-2] 일정 연계

〈표 Ⅲ-3〉 대상사업 연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div>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div> <div>제개정 법령</div> <div>제개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div> <div>조례 규칙</div> <div>제외 사항: 기관운영관리,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div>		대상사업	비 고	
<div>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div> <div>법령상 수립 근거가 있는 기본계획</div> <div>제외 사항: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계획</div>		필수	<div>○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08~'12) 사업 : 참고1</div> <div>○ 최근 3년간('09~'1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div> <div>○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div>	<div>여성발전기본법(§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div> <div>노인일자리 확충사업 등</div>
<div>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div> <div>중앙행정기관: 장관관리시행계획의 관리과제</div> <div>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사업영역서의 단위사업</div> <div>제외 사항: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정밀 관련장: 인적대상, 시설물개선, 산업육성 등 성별 관련성이 큰 사업 선정</div>		선택	<div>○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div> <div>단체장 공약사업 등</div>	

〈표 III -4〉 지표 연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div>○ 대상 선정 체크리스트</div> <div>□ 시업</div> <table><tr><th>평가항목</th><th>세부항목</th><th>평가결과</th><th>해당 사항 내용</th></tr><tr><td rowspan="2">제1차년도</td><td>제1차년도 예산안</td><td>평가결과</td><td>평가결과</td></tr><tr><td>제1차년도 예산안</td><td>평가결과</td><td>평가결과</td></tr><tr><td rowspan="2">제2차년도</td><td>제2차년도 예산안</td><td>평가결과</td><td>평가결과</td></tr><tr><td>제2차년도 예산안</td><td>평가결과</td><td>평가결과</td></tr></table>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결과	해당 사항 내용	제1차년도	제1차년도 예산안	평가결과	평가결과	제1차년도 예산안	평가결과	평가결과	제2차년도	제2차년도 예산안	평가결과	평가결과	제2차년도 예산안	평가결과	평가결과	<div>○ 예산 편성</div> <div>□ 예산 편성</div> <table><tr><th>평가항목</th><th>세부항목</th><th>평가결과</th><th>해당 사항 내용</th></tr><tr><td rowspan="2">제1차년도</td><td>제1차년도 예산안</td><td>평가결과</td><td>평가결과</td></tr><tr><td>제1차년도 예산안</td><td>평가결과</td><td>평가결과</td></tr><tr><td rowspan="2">제2차년도</td><td>제2차년도 예산안</td><td>평가결과</td><td>평가결과</td></tr><tr><td>제2차년도 예산안</td><td>평가결과</td><td>평가결과</td></tr></table>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결과	해당 사항 내용	제1차년도	제1차년도 예산안	평가결과	평가결과	제1차년도 예산안	평가결과	평가결과	제2차년도	제2차년도 예산안	평가결과	평가결과	제2차년도 예산안	평가결과	평가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결과	해당 사항 내용																																				
제1차년도	제1차년도 예산안	평가결과	평가결과																																				
	제1차년도 예산안	평가결과	평가결과																																				
제2차년도	제2차년도 예산안	평가결과	평가결과																																				
	제2차년도 예산안	평가결과	평가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결과	해당 사항 내용																																				
제1차년도	제1차년도 예산안	평가결과	평가결과																																				
	제1차년도 예산안	평가결과	평가결과																																				
제2차년도	제2차년도 예산안	평가결과	평가결과																																				
	제2차년도 예산안	평가결과	평가결과																																				
<div>○ 예산 편성</div> <div>□ 예산 편성</div> <table><tr><th>평가항목</th><th>세부항목</th><th>평가결과</th><th>해당 사항 내용</th></tr><tr><td rowspan="2">제1차년도</td><td>제1차년도 예산안</td><td>평가결과</td><td>평가결과</td></tr><tr><td>제1차년도 예산안</td><td>평가결과</td><td>평가결과</td></tr><tr><td rowspan="2">제2차년도</td><td>제2차년도 예산안</td><td>평가결과</td><td>평가결과</td></tr><tr><td>제2차년도 예산안</td><td>평가결과</td><td>평가결과</td></tr></table>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결과	해당 사항 내용	제1차년도	제1차년도 예산안	평가결과	평가결과	제1차년도 예산안	평가결과	평가결과	제2차년도	제2차년도 예산안	평가결과	평가결과	제2차년도 예산안	평가결과	평가결과	<div>○ 예산 편성</div> <div>□ 예산 편성</div> <table><tr><th>평가항목</th><th>세부항목</th><th>평가결과</th><th>해당 사항 내용</th></tr><tr><td rowspan="2">제1차년도</td><td>제1차년도 예산안</td><td>평가결과</td><td>평가결과</td></tr><tr><td>제1차년도 예산안</td><td>평가결과</td><td>평가결과</td></tr><tr><td rowspan="2">제2차년도</td><td>제2차년도 예산안</td><td>평가결과</td><td>평가결과</td></tr><tr><td>제2차년도 예산안</td><td>평가결과</td><td>평가결과</td></tr></table>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결과	해당 사항 내용	제1차년도	제1차년도 예산안	평가결과	평가결과	제1차년도 예산안	평가결과	평가결과	제2차년도	제2차년도 예산안	평가결과	평가결과	제2차년도 예산안	평가결과	평가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결과	해당 사항 내용																																				
제1차년도	제1차년도 예산안	평가결과	평가결과																																				
	제1차년도 예산안	평가결과	평가결과																																				
제2차년도	제2차년도 예산안	평가결과	평가결과																																				
	제2차년도 예산안	평가결과	평가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결과	해당 사항 내용																																				
제1차년도	제1차년도 예산안	평가결과	평가결과																																				
	제1차년도 예산안	평가결과	평가결과																																				
제2차년도	제2차년도 예산안	평가결과	평가결과																																				
	제2차년도 예산안	평가결과	평가결과																																				



[그림 Ⅲ-3] 추진체계 연계

4.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인지 예산의 편성 가능성

가.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현황

2010년에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실적보고서를 제출했던 지방자치단체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6개 기관 중 13개 기관이 정책개선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81.3%의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에 참여한 230개 기관 중 157개 기관이 보고서를 제출하여 68.3%의 참여비율을 나타내었다.⁴⁾ <표 III-5>를 보면, 정책개선과제를 제출하는 기관의 참여가 중앙에 비해 지방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지만 2009년과 비교해 보면, 제출하는 기관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다면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의 정책개선에 대한 참여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I-5〉 기관유형별 정책개선과제 제출기관 현황(2009-2010)

구분	2010년			2009년
	제출함	제출하지 않음	계	제출함
중앙	17(63.0)	10(37.0)	27(100.0)	19(63.3)
광역	13(81.3)	3(18.3)	16(100.0)	14(87.5)
기초	157(68.3)	73(31.7)	230(100.0)	187(80.6)
교육청	10(68.4)	5(33.3)	15(100.0)	11(68.8)
전체	197(68.4)	9(31.6)	288(100.0)*	23(78.6)

* 자체평가 참여기관 287개, 심층평가 참여기관 1개

자료: 여성가족부(2011), 「2010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실적을 기관유형별로 보면,

4) 여성가족부는 2008년부터 정책개선 보고서를 취합하여 수행기관의 정책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있다. 2010년에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한 성별영향평가 과제 중에서 2010년에 정책개선이 이루어진 실적을 제출받았다(여성가족부, 2010; 33).

광역시자치단체의 경우는 수행방식(27.3%), 성별통계(23.4%), 수혜평등(14.9%)의 순으로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수행방식(30.0%), 성별통계(24.2%), 수혜평등(15.8%)의 순으로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여 정책개선 내용별로 광역과 기초가 유사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수행방식의 개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성인지예산 편성에서의 개선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가 8.5%, 5.2%의 낮은 비율을 보여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거나 성인지예산 편성에서 개선의 어려움을 나타낸다. 이는 성인지예산 편성에서 의회나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1년 이상의 비교적 장시간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Ⅲ-6〉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내용별 반영현황(2010)

구분	성별통계	법령 및 지침개선	양성평등 참여	성인지 예산편성	수행방식	수혜평등	전체
광역	11(23.4)	6(12.8)	6(12.8)	4(8.5)	13(27.6)	7(14.0)	47(100.0)
기초	98(24.2)	39(9.7)	6(15.1)	21(5.2)	121(30.0)	62(15.8)	404(100.0)

* 자체평가, 복수응답

자료: 여성가족부(2011), 「2010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 사례

2010년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실적보고서를 보면 16개 시·도별로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광역자치단체들이 정책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사업은 사업분야별로 다양하다. 부산시는 ‘부산시민공원 조성사업’, ‘농업기술센터’, 인천시는 ‘과학영재발굴’, 울산시는 ‘드림스타트사업’, ‘고용촉진 훈련사업’, 대구시는 ‘팔공산공중화장실 시설정비사업’,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사업’ 경기도는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기능 강화사업’, ‘농업경영컨설팅사업’, 강원도는 ‘새농어촌 건설운동’, 충청북도는 ‘폐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도서관 건립사업’, 전라북도는 ‘전략산업인력

양성’, ‘후계농업경영인육성’, 경상북도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경상남도에는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 등에 대한 정책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표 Ⅲ-7〉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과제(2010)

기관명	과제명	평가연도	개선연도
부산광역시	부산시민공원조성사업	2008	2009-2010
	농업기술센터	2009	2010
인천광역시	과학영재발굴	2010	2010
울산광역시	드림스타트사업	2008	2009-2010
	고용촉진 훈련사업	2008	2010
대구광역시	팔공산공중화장실 시설정비	2010	2010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2009	2010
경기도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기능강화	2009	2010
	농업경영컨설팅	2009	2010
강원도	새농어촌 건설운동	2006	2010
	폐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2010	2010
충청북도	농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지원사업	2010	2010
	도서관 건립사업	2010	2010
전라북도	전략산업인력 양성	2010	2010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2010	2010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2010	2010
경상남도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	2008	2010

자료: 여성가족부(2010),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실적보고서, 미간행

그런데 이와 같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정책개선에 실제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특히 예산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사례 중에는 예산반영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고 이것을 세 가지로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영향평가 결과 시설개선하면서 예산에 반영한 경우이다. 둘째,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 평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제시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이다. 셋째, 사업 예산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배분방식을 바꾸는 경우이다.

1) 유형별 예산편성 요구·반영사례

가) 성 평등한 시설 개선을 위해 예산 반영

□ 경기도 장학관 운영(경기도, 2008년)

경기도는 지역 출신 우수대학생에게 수학상의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향토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장학관을 운영하고 있다. 2008년에는 2007년에 비하여 여학생 입사인원이 4% 정도 증가하였다. 하지만 여학생의 입사 수요가 점차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남학생이 기숙하는 방의 수가 많아 남성 입사생이 많이 선발되었다. 이는 당초 남학생이 주로 입사를 신청하는 분위기에서 남학생에게 비중을 두고 건축된 시설이 여학생의 입사를 제한하게 것이다(여성가족부, 2008).

성별영향평가 결과 경기도는 장학관의 여학생 신청인원의 증가에 따라 여학생 입사생 선발을 늘려 달라는 요구를 파악하여 2009년 입사생 선발시 반영을 계획하였다. 이에 공동 화장실 보수 공사를 하면서 남녀 사실을 교체하였다. 사생 수용인원이 남학생 144명, 여학생 192명으로 조정되었다가 2008년에는 남학생 192명, 여학생 144명이었던 장학관 시설에 여성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⁵⁾

□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서울시 송파구, 2007)

서울시 송파구는 지역에 있는 공공시설에서 여성 화장실에만 아기를 위한 변기 및 기저귀를 가는 교환대가 설치되어 있어 아버지와 동행하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부족했다. 또한 거리의 어두운 곳은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에

5) 경기도는 장학관 시설을 개보수하면서 남학생동 A동(48실)과 여학생 C동(24실)을 교체조정하면서 남학생 96실 192명, 여학생 72실 144명이 입소할 수 있도록 했던 시설을 남학생 72명 144명, 여학생 96실 192명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한 것이다(경기도 성별영향평가 결과보고서, 2008).

게 불안감을 주는 환경이었다.

송파구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시설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성 평등을 실천하고자 했다. 먼저 잠실, 방이, 송이공원 등 16곳의 화장실에는 아기 기저귀 교환대를 달아 젓먹이를 동반한 부부 외출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남자 화장실에도 아기 기저귀 교환대를 달아 유아를 동반한 아버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어둡고 인적 드문 곳에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CCTV를 달아 범죄예방 효과를 높였다. 어떤 곳이 취약한 지 알아내기 위해 12명의 여성모니터링단이 닷새간 풍납, 방이 등 6개 우범지대를 야간순찰하며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이다(여성가족부, 2009).

나) 성 평등 향상을 위해 새로운 사업에 예산 반영

□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대전시 대덕구, 2006)

대전시는 2006년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해당사업의 성 평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결혼이민자 가족 설문조사 결과 아내와 남편 모두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에 관한 필요성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다고 한다. 아내는 언어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남편은 아내 나라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 부부간의 언어와 문화의 이질감이 좁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사업을 하면서 남편을 위한 프로그램이 기획되지 않거나 일부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으나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면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남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및 예산을 편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주 여성과 이주 남성의 결혼 이민자 가족의 참여를 위한 2개 국어 이상의 안내문을 제작하여 홍보하고자 하였다(여성가족부, 2011).

다) 성별 고정관념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 예산편성에 반영

□ 노인 일자리사업(전라북도 순창군, 2008)

전라북도 순창군은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2008년에 실시하면서 성별 고정관념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개선하면서 예산편성에 반영한 사례이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들이 일을 통하여 삶의 보람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이다(여성가족부, 2008). 이는 모든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선정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재산이나 건강상태 등 선발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거쳐 참여자를 선발하고 있다. 순창군의 경우 수혜자 총 402명 중 남성이 212명, 여성이 190명으로 나타나 남녀 차이가 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일자리 유형을 살펴보면, 공익형은 남성 194명, 여성은 112명, 복지형은 남성 18명, 여성 78명으로 나타났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전라북도 순창군은 여성 일자리에 대한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성 평등하게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하였다. 이에 노인자치경찰대, 교통단속 등에 여성노인 96명이 참여해 ‘노인 일자리사업’을 성 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예산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여성가족부, 2011).

라) 저소득 계층 여성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추가 반영

□ 저소득층 주거안정화사업(경기도, 2008)

경기도는 2008년에 ‘저소득층 주거안정화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여성 가구주의 참여가 낮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경기도 성별영향평가 결과보고서, 2008). 이 사업은 도심 내 최저 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전세·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2006년 전세임대 사업 신청자는 여성가구주가 62.3%로 남성가구주의 47.7%에 비해 14.6%가 많지만 전세임대 입주 선정자는 267명 가운데 남성 가구주가 66.1%(147명)을 차지하여 여성가구주 44.9%(120명)에 비해 1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세임대 사업의 경우 여성가구주

의 신청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세임대 입주자로 선정된 저소득층의 경우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경기도는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모집단 대비 선정자비율이 낮은 저소득 계층 여성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경기도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화 사업에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빈곤한 여성 저소득층에게 ‘저소득층 주거안정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가산점을 부여했다.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여성 저소득층을 위해 일정 비율을 배정하거나 여성 저소득층의 부양가족에 대해 추가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할 경우 자칫하면 저소득층 여성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저소득층 주거안정화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저소득층 모두에게 정보가 전달되기 위하여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일괄적으로 정보를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도록 홍보물을 배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여성가족부, 2011).

□ 고객중심 맞춤형 119 구급서비스 제공(부산시, 2009)

부산시는 ‘119구급서비스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2009년에 실시하면서 노인 및 임산부를 위한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부산시는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임산부와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급대책이 보다 절실하게 필요해졌다고 판단하면서 맞춤형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구급 대원의 성별 구성을 보면 여성비율이 매우 낮았다. 부산시 소방행정통계 소방행정분야의 인사통계표(2009)에 따르면, 남녀 구급대원 317명 중 여성 구급대원 수는 41명(12.9%)으로 신규 채용 시 여성 구급대원의 채용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2007년부터 시행 중인 노인 및 임산부 전용 구급대의 경우 사용자는 만족도가 매우 높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확대실시가 어려웠다.

부산시는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정책개선과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먼저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시 여성구급대원의 채용비율을 늘려서 2010년에 24

명을 여성(구급분야 12명, 응급구조학과 12명)으로 채용하였다. 이는 구급대원 신규채용인원 44명 중 54.5%를 여성으로 채용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임산부를 위한 분만 세트를 2009년 1대에서 2010년에 2대로 늘리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다(여성가족부, 2011).

2) 기관별 예산편성 요구·반영사례

지방자치단체가 2010년 여성가족부에 제출한 정책개선실적보고서를 보면,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한 사례는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하거나 반영한 사례가 있다.

경기도는 2010년에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사업의 목적은 분단 이후 낙후되고 소외된 접경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정주의식을 높이고 소득향상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경기도는 여성들의 요구와 의견을 시설설계 및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여성들의 요구가 높은 생활환경개선사업, 문화복지시설을 확대하였다. 특히 공동작업장 및 농산물종합직판장, 팜 스테이마을 사업 등의 경우 농한기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서울시 성동구는 2009년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직장여성과 남성들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자치회관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 참여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여 주민자치의식과 지역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즉 자치회관이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구심체 역할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사업 목적을 위해 성동구는 헬스장의 이용시간을 연장하고 헬스 기구를 확충하고자 하였다. 헬스장의 이용시간을 오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연장하였고 헬스 기구를 확충하기 위해 2010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자산취득비를 증액시켰다.

서울시 양천구는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2009년

에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장애인에게 근로능력에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여 자립생활능력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양천구청은 해당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여성장애인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현황을 파악하고자 성별통계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여성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여성기업의 신청이 있을 시 적극 지원하는 한편, 여성 장애인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활동을 하면서 이를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부산시 서구는 ‘생활체육활성화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2008년에 수행하였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생활체육의 여건을 조성하고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활기찬 사회생활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서구청은 성별영향평가 결과 여성주민의 참여를 보다 높이고자 ‘여성생활체육강좌’ 운영비를 별도로 편성하였다.

부산시 동구는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2009년에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노인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었다. 동구청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육아도우미지원사업’ 등 여성일자리 지원을 확대하면서 여성참여자를 증대시켰다. 2009년에서 2010년까지 여성노인의 참여비율이 5% 높아진 것이다. 동시에 2010년 여성 참여를 위한 특정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당해연도 여성참여 예산편성 비율을 5% 높였다.

인천시 부평구는 ‘취업정보센터 활성화 및 고용촉진훈련강화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2008년에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취업정보센터와 공공근로사업 및 청년인턴십제도를 운영하면서 성별 이용현황을 고려하고 성 평등에 기초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하는데 목적을 두어 사업 목표 설정에서부터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한 경우이다. 부평구청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업의 성 평등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면서 예산을 배정하였다. 즉 현재 운영 중인 공공근로사업 및 청년인턴십제도와 병행하여 여성만을 위한 여성취업활성화 사업을 운영하는 한편, 취업정보센터를 운영 설치하면서 성별로 구분하고 여성근로자 취업활성화를 위해 사업비를 배정한 것이다.

경기도 수원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 지원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를 2008년에 시행하면서 성별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자금지원사업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 사업은 자금난을 겪는 기업 및 여성기업인 업체에 저리융자로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과 자생적인 경쟁력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었다. 수원시청은 성별영향평가 결과 여성기업인 대상의 성별 만족도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정책개선을 위해 예산편성에 반영하였다. 융자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2%에서 3%로 상향 조정하여 여성기업인의 경영안정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금지원사업의 일부를 개선하였다.

〈표 Ⅲ-8〉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인지 예산편성 사례(2010)

기관명	과제명	사업목적	정책개선실적	평가 년도	개선 년도
경기도	접경지역 정부환경 개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단이후 낙후되고 소외된 접경지역의 정주 환경 개선 및 생산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 정주의식 고취 및 소득 향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경지역 지원사업 대상사업산정시 여성의견 반영하여 생활환경개선사업 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28건 중 12건 : 43%(‘10년) 총 29건 중 15건(52%)(‘11년) ○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전 과정에 여성의견 수렴 ○ 농한기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 	2009	2009 - 2011
서울시 성동구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회관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적극적인 주민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자치의식과 지역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여 주민자치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이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여성, 남성 등을 넓히기 위해 이용시간 연장 - 헬스기구 확충을 위한 2010년 예산편성(자산취득비 증액) - 헬스장 새벽 및 야간운영(06:00-22:00), 10개동 자치회관 운영 	2009	2010
서울시 양천구	장애인일 자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에게 근로능력에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여 자립생활 능력을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성별통계 활용하여 여성 장애인의 현황 파악 ○ 적극적인 홍보로 여성기업의 신청이 있을 시 적극 지원, 여성장애인 대상의 홍보 활성화 	2009	2010
부산시 서구	생활체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생활체육의 여건 조성하고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생활체육강좌’ 운영비를 별도로 편성 	2008	-

기관명	과제명	사업목적	정책개선실적	평가 년도	개선 년도
		건강 증진과 활기찬 사회생활 유도			
부산시 동구	노인 일자리 사업	○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노인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 육아도우미 지원사업 등 여성 일자리 지원 및 여성 참여자 증대('09~'10년 동안 5% 증가) ○ '10년 여성참여자를 위한 특정 사업기간 연장을 통해 당연연도 여성참여자 예산편성 비율 5% 증대	2009	2010
인천시 부평구	취업정보 센터 활성화 및 고용촉진 훈련 강화	○ 취업정보센터와 공공 근로사업 및 청년인턴ship 제도에 성별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양성평 등에 기초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	○ 여성근로자취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배정 - 현재 운영 중인 공공근로사업 및 청년인턴ship 제도와 병행하여 여성만을 위한 여성 취업 활성화 사업 운영 - 취업정보센터 운영 설치 : 성별통계 가능	2008	2010
경기도 수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사업	○ 자금난을 겪는 기업 및 여성기업인 업체에 저금리융자를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과 자생적인 경쟁력을 제고	○ 여성기업인 성별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한 자금지원 개선 - 융자기간 확대 : 3년→5년 - 이차보전금 지급 상향 조정: 2%→3%	2008	2011

자료: 여성가족부(2011),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실적보고서」

IV

결론

1. 요약	67
2. 결론	67

1. 요약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제도 연계방안을 검토하였다. 3대 제도 연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법적 근거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격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2012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의 연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2012년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미 성별영향평가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 등 실무적인 이유로 이들 제도 연계의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방재정법」 개정⁶⁾에 따라 2012년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양식 및 지침(안)을 개발하였다.⁶⁾ 그리고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제도 연계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관련법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관련 지침 및 양식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2. 결론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제도 연계 형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가. 3대 제도의 일정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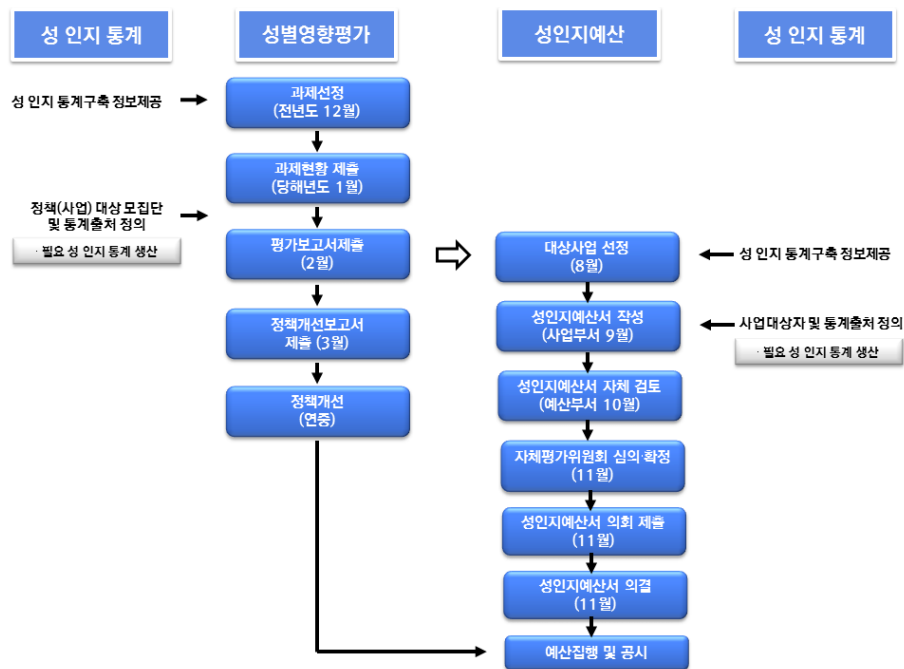
3대 제도의 연계가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그 동안의 성별영향평가는 전년도 12월부터

6) 이 연구에서 개발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양식 및 지침(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담당 부서에 제출되어, 여성가족부, 전문가 등의 검토를 통해 수정·보완 중에 있다.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다음해 2월에 성별영향평가보고서가 제출되고, 이후에는 정책개선보고서 제출 등 정책개선에 일정이 집중되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는 해당년도 8월에 대상사업이 선정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통상적인 예산서 작성 일정에 따라 9월부터 단계적으로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되어, 11월에 예산서의 부속서류로 지방의회에 제출된다.

이들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서의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은 양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성 인지 통계의 구축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특정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사업대상자(모집단), 사업수혜자, 예산배분과 관련된 성 인지 통계가 사전에 구축되어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앞서 성 인지 통계 구축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미구축 성 인지 통계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림 IV-1] 일정 연계

나. 3대 제도의 대상사업 연계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이 기존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뿐만 아니라 법령, 기본계획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단위사업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필수 대상사업 가운데 하나로 ‘최근 3년간의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서가 단위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사업 수준에서 작성된다.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과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특징은 두 제도의 연계의 긍정적인 조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단위사업을 구성하는 세부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배분 등의 성 인지적 개선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가능할 것이다.

반면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특정 연도에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은 연계과정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성 인지 통계 구축 정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단위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와 관련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 3대 제도의 지표 연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는 양대 제도의 지표를 매개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가장 최근에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에는 “사업수혜”와 “예산배분”의 성별형평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항목에는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구분”으로 구성된 “성별 수혜분석”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사업수혜”와 “예산배분”의 성별 형평성은 성

인지예산서의 “성별 수혜분석”이 연계의 고리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업수혜 인원, 개인별로 배분된 예산에서의 성별 분포(성별 통계)를 통해 예산 배분의 성별 형평성을 두 제도가 동시에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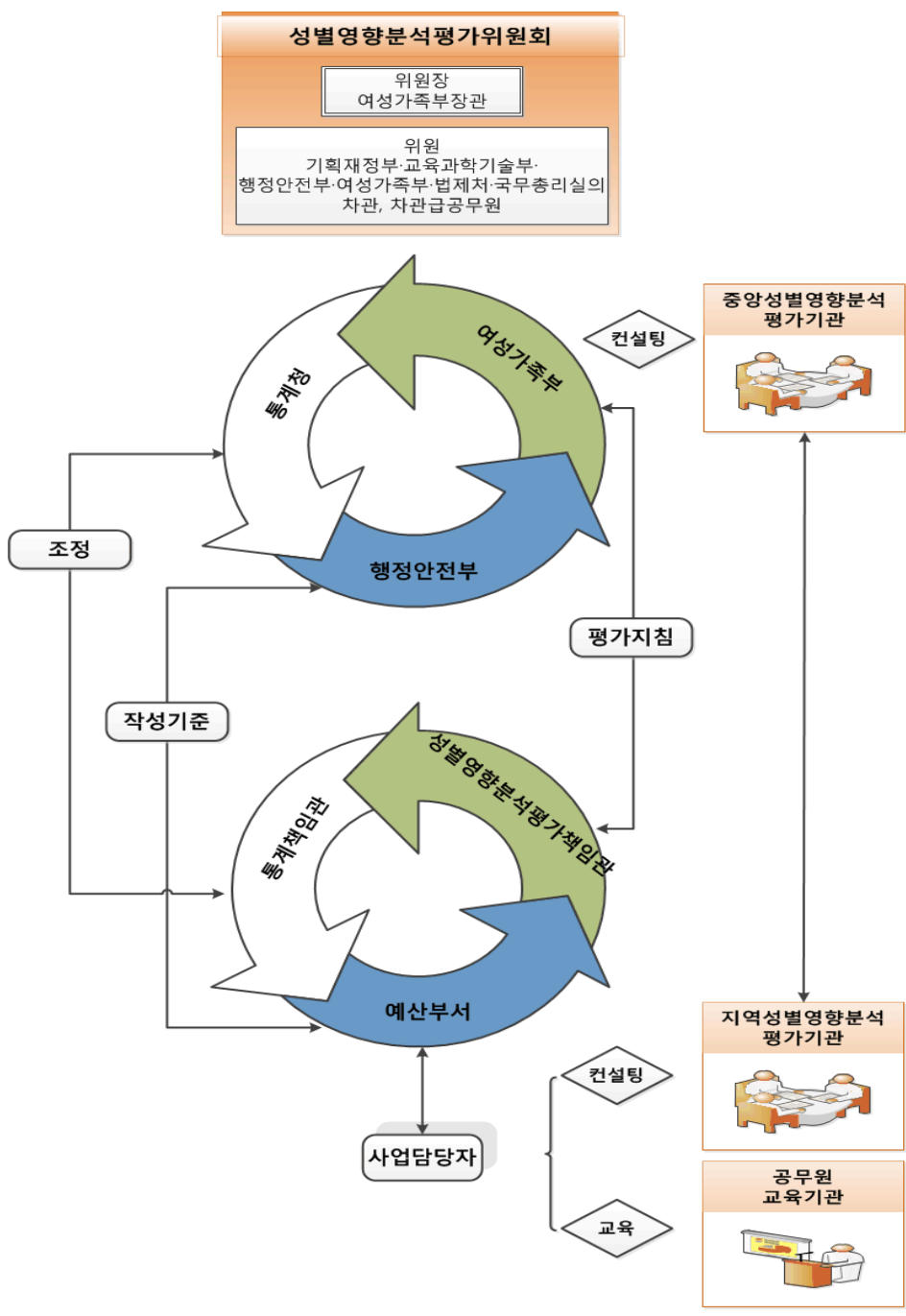
이들 지표 및 작성항목과 관련하여 성 인지 통계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사업대상자”를 통계적으로 정의하고, 그에 따라 성별 구분 통계 등 성 인지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다. 사업담당자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본인이 담당하는 사업의 사업대상자를 특정화하여 정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별 구분 통계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담당 공무원은 성별영향분석평가지원기관 등의 전문가로부터 지속적인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 배분의 성별 구분 통계의 구축 여부이다. 사업대상자 통계의 경우, 현실적으로 시·군·구 수준에서 성별로 구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승인통계가 제한되어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사업수혜자와 예산 배분과 관련된 성별 구분 통계는 사업담당부서 등에서 일관되게 생산, 구축할 필요가 있다.

라. 3대 제도의 추진체계 연계

3대 제도의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각 제도의 추진체계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성 인지 통계는 통계청,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는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성 인지 통계는 통계책임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 성인지예산서는 예산부서에서 총괄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서는 동일한 사업담당자가 수행하게 된다. 즉, 실제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사업담당자는 동일인인 반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이들 제도의 담당부서가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사업담당자는 이들 3개 담당부서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전문가의 컨설팅 등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림 IV-2] 추진체계 연계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1),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2011. 5.
- 김경희 외 (2007), 『성별영향평가와 연계를 통한 성인지예산 운영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김경희·양애경·문유경·김돌순·송치선·남궁윤영·박기남·류연규(2010),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 (Ⅲ):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양희·김경희·류연규·장운선·박영란·김혜란(2007), 『성별영향평가 중장기 로드맵 개발』, 여성가족부.
- 마경희·김경희·김양희·박기남·김효선(2009), 『성인지 예산제도와 성별영향평가의 효과적 운영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재규·마유미·홍정화 (2009), 『2008년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과제의 정책환류 내용분석』,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여성가족부(2011), 『성별영향평가 지침』.
- 여성가족부(2011), 『성별영향평가 종합 분석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2008), 「성별영향평가 결과보고서」, 미간행.
- 여성가족부(2009), 「성별영향평가 결과보고서」, 미간행.
- 여성가족부(2010),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실적보고서」, 미간행.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 『성별영향평가 결과보고서 DB. (2005~2009)』, 내부자료.

Abstract

Research on the integration of gender statistics,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gender budgeting at local levels

Ki-Taek Jeon
Kyung-Hee Kim
Ga-Won Chung
Youn-Zee Lee

This research examined the strategies to link gender statistics,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gender budgeting at local levels. There have been several attempts to integrate the three systems, but the complete integration was not possible as there was no legal ground. However, through a new legislation on gender impact assessment effective from March 2012,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gender budgeting will be officially linked, and the expectations from local governments need to be met by fully integrating the two systems so that local governments can undertake those related tasks more effectively. To assist this integration process, we have developed the gender budgeting statement form and instructions that will be used by local governments from 2012. And we

also examined a few ways to integrate these three systems and related legislations. Based on the results, we propose concrete strategies to integrate gender statistics,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gender budgeting at local levels by providing a tentative schedule, targeted programs, and implementing structures.

1. Linking the schedule: Gender statistics need to be accumulated before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gender budgeting are implemented.
2. Linking the targeted programs: The results from gender impact assessment will provide the basis when selecting programs which will be targeted by gender budgeting.
3. Linking the index: The gender equity index from gender impact assessment, such as “program beneficiary” and “budget distribution” can be linked to the “gender beneficiary analysis” from gender budgeting statement. To make such a link, “program target group” needs to be defined beforehand and gender statistics need to be collected in terms of “program target group”, “program beneficiary”, and “budget distribution”.
4. Linking the implementing structures: At a national level, “Statistics Korea”,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should collaborate to establish the implementing structures. At the same time, “Gender statistics deputy”, “Gender impact assessment deputy”, and “budgetary department” will have to work together as local levels.

2011 연구보고서(수시과제)- 10

**지방자치단체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연계방안 연구**

2011년 9월 28일 인쇄

2011년 9월 30일 발행

발행인 : 최 금 숙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25(불광동 1-363)

전화 / 02-3156-7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02-313-7593 (代)

ISBN 978-89-8491-470-4 93330

<정가 9,000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122-70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25
TEL 02. 3156. 7000 FAX 02. 3156. 7007 <http://www.kwdi.re.kr>



ISBN 978-89-8491-470-4